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방향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장
gskang@kiep.go.kr

김종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jhkim@kiep.go.kr

임지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veryberry925@gmail.com

윤여준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yoonyj@pusan.ac.kr



차 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주요 내용

- ▶ 본 연구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대외경제정책의 영향 및 효과를 분석하고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전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주요 내용을 무역정책과 투자 및 리쇼어링 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봤음.
 - [무역정책]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통상법(통상법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 통상법 301조)에 의거하여 수입품 고율 관세부과 조치를 포함한 수입규제 조치를 실시하였고, 기체결 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 및 신규 무역협상을 진행하였으며, 디지털 무역규범 현대화를 추진하였음.
 - [투자 및 리쇼어링 정책]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을 도입하였고, 자국기업의 리쇼어링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개혁을 단행하였음.
- ▶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영향을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고용 및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과 2018년 세제개편이 미국의 해외직접투자(FDI)에 미친 영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는 고용에는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 나 산업생산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했던 정책 효과를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트럼프 행정부의 2018년 세제개편은 미국의 해외직접투자(FDI)를 단기적으로 감소시켰으나 정책 효과의 지속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 바이든 신행정부 대외경제정책의 핵심은 △ 다자주의 무역체제 및 동맹과의 연대 강화 △ 대중국 견제 강화 △ 미국산 제품 우선구매 강화 △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라고 할 수 있음.
 -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은 공통적으로 미·중 간 갈등 상황 속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발발을 계기로 주요 품목 및 산업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동맹과 협력을 통해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정책에 힘을 쏟고 있음.
- ▶ 이에 한국은 ① 디지털 무역규범 현대화의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중견국과의 디지털 교역 협력을 강화하고 ②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 연방정부 제공 혜택을 활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과 규범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며 ③ 기존 미국으로부터 적용받고 있는 무역구제조치에 대해 미국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20년 11월 4일에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현직 대통령이자 공화당의 대선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를 제치고 제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바,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으로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펼쳤던 대외경제정책의 영향 및 효과를 분석하고 바이든 행정부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을 전망하고자 함.
 -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4년간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다양한 보호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을 펼쳐왔음.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삼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각국에서 수입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
 - 또한 중국에 대해서는 그들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이 미국 산업 및 미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명목 아래 「통상법」 301조에 의거하여 3,7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중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
 - 이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에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한·미 FTA 등이 미국에 불리하게 이뤄진 무역협정임을 비판하며 재협상 추진 및 개정을 달성하였음.
 - 더불어 자국 빅테크 기업의 디지털 교역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무역규범을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 또한 전임 정부 식의 보호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을 펼치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체결한 1단계 미·중 간 무역합의에 규정되어 있는 중국 측 약정사항 이행을 강요하며 기존 2,700억 달러 규모의 대중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를 유지하는 레버리지 전략을 활용하고 있음.
 -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발발을 계기로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중요광물, 의약품 등 필수 물자 및 주요 산업에 대해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중심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 및 재편할 것을 지시하였음.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대외경제정책의 영향 및 효과를 분석하고 이어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전망함으로써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임.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주요 내용

① 무역정책

가) 자국 통상법에 근거한 수입규제 조치

●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통상법 조항에 의거하여 전 세계로부터의 다양한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부과를 포함한 수입규제 조치를 실시

- 1974년에 제정된 「통상법」 201조 세이프가드 조치는 두 가지 품목(태양광 제품과 대형 세탁기)을 대상으로 시행
 - 먼저 태양광 제품의 경우,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태양광 셀 및 모듈 수입급증으로 인해 국내생산 위축, 자국기업 수익 감소, 투자여력 부족 등이 발생하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 필요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

표 1.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태양광 제품 201조 세이프가드 조치 내용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태양광 셀/모듈	할당	2.5GW	2.5GW	2.5GW	2.5GW
	관세	30%	25%	20%	15%

자료: USTR(2018. 1), "Fact Sheet: Section 201 Cases: Imported Large Residential Washing Machines and Imported Solar Cells and Modules," p. 4.

- 태양광 제품에 대한 201조 세이프가드 조치(2018년 2월) 이후 미국의 3대 태양광 셀 및 모듈 수입국으로부터의 2018년 수입액은 전년대비 급감(말레이시아: -23.8%, 중국: -51.4%, 베트남: -52%)하였는데, 그중 미국의 대베트남 수입액은 2016년과 2017년 각각 전년대비 187.3%, 48.0%의 증가율을 기록한 후 세이프가드 조치가 시행된 2018년에 큰 폭으로 감소한 점이 특징적임.
- 다음으로 대형 세탁기의 경우, USITC는 세탁기 수입급증으로 인해 자국기업의 재정상태가 악화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
- 해당 세이프가드 조치의 주요 타깃이 한국의 LG전자와 삼성전자였다는 점에서 2018년 기준 미국의 대한민국 세탁기 수입액은 2017년 대비 약 48% 감소하였으며, 한국 세탁기의 대미 우회 수출국으로 인식된 베트남과 태국으로부터의 2018년 미국 세탁기 수입액은 전년대비 각각 59.7%, 52.5%로 큰 폭의 감소를 기록

표 2. 미국의 태양광 셀/모듈(HS code: 8541.40)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월)
1	말레이시아	1,539,022	2,704,232	1,806,900	1,376,662	2,671,505	2,716,874	1,165,925
2	중국	2,367,682	2,240,118	1,259,250	612,497	393,089	544,463	119,713
3	베트남	182,354	523,931	775,424	372,188	1,642,546	2,386,628	1,010,991
4	한국	640,935	1,354,932	1,106,963	652,964	761,029	1,064,469	366,036
5	태국	87,735	580,332	495,091	243,115	577,932	1,425,753	555,445
6	멕시코	1,027,048	887,597	344,447	387,827	254,689	160,100	29,181
7	싱가포르	432,187	393,055	178,954	169,289	190,140	196,724	95,043
8	대만	422,163	339,073	123,064	146,833	220,404	199,544	97,809
9	독일	462,579	231,065	93,283	93,579	87,658	76,977	34,070
10	필리핀	134,887	180,715	89,503	108,498	67,690	74,910	37,499
총수입		8,423,643	10,729,761	7,567,272	5,485,161	8,143,413	10,183,646	4,088,697

주: 순위는 2015~21년(5월) 총 수입액 기준.

자료: USA Trade Online(검색일: 2021. 7. 14).

표 3.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대형 세탁기 관련 제품 201조 세이프가드 조치 내용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대형 가정용 세탁기	저울관세	20%	18%	16%
	할당량	120만 대	120만 대	120만 대
	고율관세	50%	45%	40%
대형 가정용 세탁기 부품	저울관세	0%	0%	0%
	할당량	5만 개	7만 개	9만 개
	고율관세	50%	45%	40%

자료: USTR(2018. 1), "Fact Sheet: Section 201 Cases: Imported Large Residential Washing Machines and Imported Solar Cells and Modules"(검색일: 2021. 7. 14); 배찬권, 엄준현, 정민철(2018), 「최근 미 세이프가드(통상법 201조) 조치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표 4. 미국의 가정용 세탁기(HS code: 8450.20)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월)
1	중국	979,563	678,852	29,631	92,691	138,887	147,532	131,238
2	베트남	0	165,869	613,091	246,801	190,351	223,786	48,251
3	태국	8,684	128,779	462,766	219,670	163,095	185,210	112,533
4	멕시코	182,971	173,152	159,845	160,037	129,799	117,684	49,252
5	한국	70,614	115,433	243,956	127,802	113,395	132,020	129,496
6	스웨덴	22,228	20,797	22,118	28,728	27,574	21,263	8,784
7	스페인	15,039	15,523	21,031	19,864	20,395	12,040	5,693
8	독일	15,011	17,430	12,827	17,430	16,991	10,349	2,046
9	체코	13,055	10,597	14,540	16,028	10,849	8,103	4,793
10	이탈리아	3,747	8,274	24,014	8,664	8,838	3,686	2,319
총수입		1,312,927	1,336,722	1,605,836	939,733	822,193	863,693	496,426

주: 순위는 2015~21년(5월) 총 수입액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미주무역통계(검색일: 2021. 7. 14).

- 1962년에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하여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대세계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부과를 실시
 - 미국 상무부는 2017년 4월에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232조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2018년 2월에 해당 제품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에 해당한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3월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각각 25%, 10%의 고율 관세부과 조치를 지시
 -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 이후 2019년 기준 미국의 러시아(-50.0%), 독일(-24.7%), 우크라이나(-27.6%), 대만(-29.1%), 네덜란드(-24.4%), 남아공(-23.5%), 중국(-23.6%)으로부터의 철강 수입액이 타국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 미국의 대세계 철강 수입액 감소폭은 더욱 확대됨.

표 5. 미국의 국가별 철강(HS code: 72)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

국가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캐나다	수입액	4,428,930	4,114,385	5,200,525	5,789,291	4,764,467	4,392,974
	증감률	-21.9	-7.1	26.4	11.3	-17.7	-7.8
브라질	수입액	2,937,230	2,098,177	2,839,994	3,104,929	3,364,790	2,096,104
	증감률	-18.8	-28.6	35.4	9.3	8.4	-37.7
멕시코	수입액	1,452,658	1,420,556	1,727,311	2,202,537	2,075,218	1,838,859
	증감률	-35.9	-2.2	21.6	27.5	-5.8	-11.4
한국	수입액	2,212,232	1,699,609	1,323,551	1,544,371	1,488,383	1,086,204
	증감률	6.0	-23.2	-22.1	16.7	-3.6	-27.0
러시아	수입액	1,573,198	1,285,074	2,541,021	2,771,961	1,385,831	896,976
	증감률	-52.7	-18.3	97.7	9.1	-50.0	-35.3
독일	수입액	1,212,072	1,040,599	1,193,388	1,217,178	916,439	715,024
	증감률	7.1	-14.1	14.7	2.0	-24.7	-22.0
일본	수입액	1,547,160	1,183,516	1,235,915	1,107,908	946,593	671,833
	증감률	-9.4	-23.5	4.4	-10.4	-14.6	-29.0
우크라이나	수입액	257,598	258,137	529,644	786,264	569,282	625,123
	증감률	-20.8	0.2	105.2	48.5	-27.6	9.8
대만	수입액	1,046,699	811,849	975,038	788,856	559,276	480,360
	증감률	-6.2	-22.4	20.1	-19.1	-29.1	-14.1
트리니다드 토바고	수입액	444,645	304,779	501,499	563,527	562,338	414,054
	증감률	-32.8	-31.5	64.5	12.4	-0.2	-26.4
네덜란드	수입액	574,524	549,023	572,579	622,019	470,029	409,818
	증감률	-27.4	-4.4	4.3	8.6	-24.4	-12.8
스웨덴	수입액	528,651	507,370	573,546	581,438	469,986	374,218
	증감률	-23.9	-4.0	13.0	1.4	-19.2	-20.4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입액	615,376	506,679	921,738	751,845	575,398	368,528
	증감률	-38.3	-17.7	81.9	-18.4	-23.5	-36.0
중국	수입액	1,864,248	632,114	637,039	651,860	498,327	313,429
	증감률	-27.8	-66.1	0.8	2.3	-23.6	-37.1
호주	수입액	236,746	234,265	365,613	434,460	409,400	300,030
	증감률	-14.2	-1.0	56.1	18.8	-5.8	-26.7
총수입	수입액	26,335,187	21,220,878	27,468,158	29,632,420	23,407,191	17,879,410
	증감률	-23.1	-19.4	29.4	7.9	-21.0	-23.6

주: 순위는 2020년 국별 수입액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미주무역통계(검색일: 2021. 9. 15).

- 미국의 알루미늄 수입의 경우, 232조 관세부과 조치 이후 2019년 기준 중국(-17.7%), UAE (-15.8%), 러시아(-34.5%), 남아공(-18.8%)으로부터의 수입액이 타국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대한민국 수입액은 2018년과 2019년에 전년대비 각각 75.7%, 19.3% 증가한 이후에 2020년에는 전년대비 -20.6%로 크게 감소

표 6. 미국의 국가별 알루미늄(HS code: 76)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

국가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캐나다	수입액	7,238,552	6,851,406	8,415,320	8,180,001	6,967,926	6,878,475
	증감률	-1.3	-5.3	22.8	-2.8	-14.8	-1.3
중국	수입액	2,958,869	2,901,716	3,350,462	2,851,996	2,347,544	2,358,411
	증감률	16.1	-1.9	15.5	-14.9	-17.7	0.5
멕시코	수입액	822,410	870,611	1,003,755	1,211,691	1,029,071	1,238,380
	증감률	-1.0	5.9	15.3	20.7	-15.1	20.3
아랍에미리트 연합	수입액	667,344	1,019,909	1,397,675	1,504,113	1,265,945	831,896
	증감률	6.7	52.8	37.0	7.6	-15.8	-34.3
독일	수입액	580,953	511,428	539,335	659,812	812,883	601,494
	증감률	6.2	-12.0	5.5	22.3	23.2	-26.0
인도	수입액	223,438	199,993	464,290	693,277	645,619	399,959
	증감률	39.4	-10.5	132.2	49.3	-6.9	-38.1
러시아	수입액	743,332	1,328,096	1,577,692	929,046	608,064	394,800
	증감률	-6.1	78.7	18.8	-41.1	-34.5	-35.1
바레인	수입액	293,492	407,157	603,437	669,273	729,156	358,146
	증감률	15.5	38.7	48.2	10.9	8.9	-50.9
태국	수입액	268,600	265,887	253,680	279,297	293,761	337,272
	증감률	17.6	-1.0	-4.6	10.1	5.2	14.8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입액	163,384	231,352	341,888	479,918	389,791	322,450
	증감률	-34.7	41.6	47.8	40.4	-18.8	-17.3
아르헨티나	수입액	200,142	332,162	548,219	444,430	413,392	318,818
	증감률	13.4	66.0	65.0	-18.9	-7.0	-22.9
한국	수입액	200,890	177,951	181,941	319,626	381,465	302,946
	증감률	-5.3	-11.4	2.2	75.7	19.3	-20.6
이탈리아	수입액	153,608	199,454	229,918	290,135	338,568	288,611
	증감률	-0.6	29.8	15.3	26.2	16.7	-14.8
사우디 아라비아	수입액	177,031	100,560	164,489	232,764	294,730	280,122
	증감률	335.5	-43.2	63.6	41.5	26.6	-5.0
콜롬비아	수입액	122,701	174,909	154,523	214,403	247,674	275,751
	증감률	29.5	42.5	-11.7	38.8	15.5	11.3
총수입	수입액	17,390,047	18,139,594	22,670,267	23,546,469	21,567,695	18,403,505
	증감률	4.3	4.3	25.0	3.9	-8.4	-14.7

주: 순위는 2020년 국별 수입액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미주무역통계(검색일: 2021. 9. 15).

- 1974년에 제정된 「통상법」 301조에 의거하여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명목으로 3,700억 달러 규모의 대중국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부과 실시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2017년 8월부터 중국에 대한 301조 조사를 시작하였고, 이어 2018년 3월에 301조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7월부터 대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를 지시

표 7. 미국의 대중국 301조 관세부과 조치 내용

대중 301조 리스트	품목 수 및 관세율
1차 리스트	약 820개 품목에 대한 25% 관세
2차 리스트	약 280개 품목에 대한 25% 관세
3차 리스트	약 5,760개 품목에 대한 25% 관세
4차 리스트(A)	약 3,250개 품목에 대한 7.5% 관세
4차 리스트(B)	약 550개 품목에 대한 15% 관세(철회됨)
종합	중국산 수입품(2,7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7.5~25% 관세

주: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 이후 현황.

자료: CRS(2020), "Trump Administration Tariff Actions: Frequently Asked Questions," p. 10, p. 15.

나) 기체결 무역협정 재협상 및 신규 무역협상 진행

●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에 체결된 무역협정에 대해 무역 불균형 문제, 일부 조항의 현대화 필요성 등을 제기 하며 재협상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체결 및 한·미 FTA 재협상 타 결을 달성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존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에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 조항 현대화 및 무역 불균형 해소 필요성 등을 주장하며 멕시코와 캐나다에 재협상을 요구하였고, 협상 개시 3년 만인 2020년 7월에 NAFTA를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이 발효됨.
 - 새로운 USMCA에서는 자동차 원산지 규정,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노동 등 기존 NAFTA 조항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환율, 비시장국과의 FTA, 일몰조항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음.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로 인해 양국간 무역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재협상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2018년 3월에 양측이 협정 개정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한 후 2019년 1월부터 발효됨.
 - 개정된 한·미 FTA를 통해 한국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섬유 원산지 기준 개정의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미국은 자동차 안전 기준 및 환경 기준 개선, 글로벌 혁신신약 약 가 우선 제도, 원산지 검증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달성하였다는 평가

-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양자주의적 접근 방식을 통해 새로운 무역협상에 임하였고, 그 결과로서 일본과 미·일 무역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일본에 대해 농·축산물 시장 개방, 대일 무역적자 감축 등을 요구하였고, 이에 일본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2018년 9월부터 무역협상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2019년 10월에 양측은 미·일 무역협정 합의안에 최종 서명
 - 미·일 무역협정은 상품 분야뿐만 아니라 디지털 무역협정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해당 디지털 무역협정은 USMCA와 유사하며 CPTPP보다는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규범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주의적 관점에서 시장접근, 원산지 규정을 중심으로 영국과 다섯 차례 FTA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EU와는 2018년 6월에 새로운 통상협상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으나 이후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EU의 고율 관세, 농산물 시장 개방, 비관세장벽 철폐, 항공사 불법보조금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협상에 진전을 이루지 못함.

다) 디지털 무역규범 표준화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다국적 빅테크 기업의 디지털 교역 확대를 지원하고 납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디지털 무역규범 표준화 및 디지털세 과세대상 확대를 추진
 - 디지털 무역규범 표준화 추진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그간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규범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USMCA와 국경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 데이터 현지화 조치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미·일 무역협정을 꼽을 수 있음.
 -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다국적 디지털 기업만을 대상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하자는 EU, 영국 등의 입장과 달리 소비자재 제조기업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국 빅테크 기업의 납세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 바 있음.

② 투자 및 리쇼어링 정책

가) 외국인직접투자(FDI) 정책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을 도입
 -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2010년대 초중반을 거치면서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였으며, 투자형태는 주로 중국기업이 미국업체를 인수합병(M&A)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음.
 - 2010년에 45.7억 달러에 불과했던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액은 2016년 기준으로 603억 달러까지 증가하면서 미국의 우려가 심화되었으며,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 건 중 93%가 중국기업의 미국업체에 대한 M&A 형태로 진행되었음.

-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심사 권한 강화를 포함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을 도입
 -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 확대 시도를 막기 위해 미국의 핵심기술 및 핵심시설에 대한 사실상의 모든 외국인투자를 심사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이 개정을 거쳐 2020년 2월 13일부터 발효됨.

나) 리쇼어링 정책

-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리쇼어링 정책으로는 2018년 세제개혁 단행을 들 수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 대폭 감면 및 미국 다국적 기업의 국외소득 이전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을 실시함으로써 자국기업의 리쇼어링을 유도하고자 하였음.
 - 법인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미국 다국적 기업이 납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에 유보 중인 소득을 국내로 송금할 시 특별세율(현금: 15.5%, 자산: 8%) 적용 등

2)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영향 분석

① 자국 통상법에 근거한 수입규제 조치가 미국 내 고용 및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

- Flaaen and Pierce(2020)에서 사용된 관세부와 영향 경로를 활용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품 관세부와 조치가 미국 산업별 고용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품 관세부와 조치가 종속변수(미국 산업 고용 및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로로써 Flaaen and Pierce(2020)에서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경로(자국기업 보호, 생산비 상승, 보복관세)를 사용
 - 자국기업 보호경로(ip_i)

$$ip_i = \frac{\sum_{kl \in \Omega^K} imp_{ikl} \Delta \tau_{ikl}}{Q_i + imp_i - exp_i}$$

i : 산업

k : 수입품목

l : 국가

Ω^K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와 대상 국가-수입품 목록 집합

imp_{ikl} : 산업 i 의 관세부와 대상 품목별 국가 l 로부터의 수입액

$\Delta\tau_{ikl}$: 산업 i 의 수입품목별 인상 관세율

Q_i : 산업 i 의 국내생산

imp_i : 산업 i 수입액

exp_i : 산업 i 수출액

○ 생산비 상승경로(rc_i)

$$rc_i = \sum_j \frac{usage_{ij}}{m_i + compen_i} \frac{\sum_{kl \in \Omega^K} imp_{jkl} \Delta\tau_{jkl}}{Q_j + imp_j - exp_j}$$

j : 산업

$usage_{ij}$: 산업 i 의 최종재 생산에 중간재로 사용되는 산업 j 의 투입액

m_i : 산업 i 의 최종재 생산에 투입된 중간재 총액

$compen_i$: 산업 i 의 최종재 생산 과정에서 지급된 피용자보수

○ 보복관세경로(fr_i)

$$fr_i = \frac{\sum_{kl \in \Omega^F} exp_{ikl} \Delta\tau_{ikl}}{Q_i}$$

Ω^F : 대미 교역국의 보복관세 부과 대상 수입품 목록 집합

- 상기와 같이 구축한 세 가지 경로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차분 일반화적률법(Difference GMM) 모형을 통해 추정

○ 본 분석에 차분 일반화적률법 모형을 적용한 이유는 1) 종속변수($\log(y_{i,t})$)로 사용하고 있는 $\log$ 를 취한 산업별 고용자 수와 산업생산 변수의 시차변수(lagged variables)가 당기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2) 차분 일반화적률법을 사용하면 산업 고정효과(λ_i)를 제거하기 위해 차분했을 경우 종속변수의 시차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함으로써 오차항의 차분항에 존재할 수 있는 자기상관성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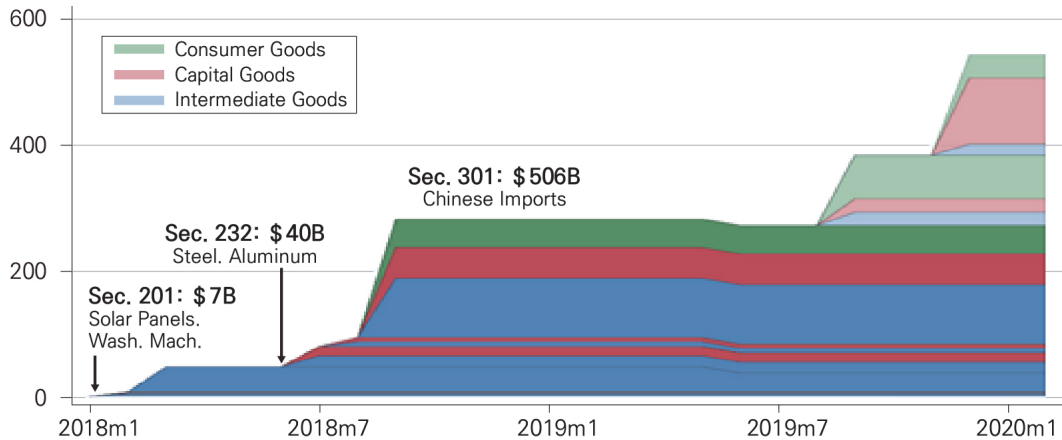
$$\log(y_{i,t}) = \zeta + \delta y_{i,t-1} + \gamma_1 ip_{i,t-1} + \gamma_2 rc_{i,t-1} + \gamma_3 fr_{i,t-1} + \gamma_4 Export Share_{i,t} + \gamma_5 Import Share_{i,t} + \lambda_i + \nu_{i,t}$$

$Export Share_{i,t} / Import Share_{i,t}$: 산업 i 의 연도 t 수출 및 수입 비중

$\nu_{i,t}$: 특이오차항

그림 1.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품 관세부과 대상품목 구성

(단위: 십억 달러)



자료: Flaaen and Pierce(2020), p. 25.

- 분석 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는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경로를 통해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8]의 첫 번째 칼럼에 따르면 자국산업 보호경로는 5%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고용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수치로 환산하면 자국산업 보호경로가 1단위 증가할 경우 미국 산업고용은 89.5%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같은 표의 네 번째 칼럼에 따르면 자국산업 보호경로, 생산비 상승경로, 보복관세경로를 하나의 회귀모형에 포함시켜 추정했을 경우, 각 경로에 대한 추정계수 모두 통계적 유의성은 사라지나 부호는 각각 양(+), 음(-), 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각 경로가 미국 산업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과 부합하는 결과
-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는 세 가지 경로(자국산업 보호경로, 생산비 상승경로, 보복관세경로) 모두를 통해 산업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9]의 네 번째 칼럼에 따르면 자국산업 보호경로는 산업생산에 음(-)의 영향, 생산비 상승경로는 양(+)의 영향, 보복관세경로는 음(-)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음.
 -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로 인해 해당 산업에서 수입 경쟁이 줄어들면서 미국기업이 관세부과 시점 전보다는 적은 물량을 생산하는 동시에 고율관세가 부과된 수입품보다는 낮은 내수가격을 책정함으로써 마진율을 제고했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음.
 - 다만 생산비 상승경로가 다른 경로에 비해 영향은 적으나 미국 산업생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당초 예상했던 것과는 배치되는 결과

표 8.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와 조치가 미국 산업고용에 미친 영향

구분	(1) log(고용)	(2) log(고용)	(3) log(고용)	(4) log(고용)					
자국산업 보호경로(ip)	0.895* (0.406)			2.519 (7.149)					
생산비 상승경로(rc)		0.001* (0.001)		-0.003 (0.012)					
보복관세 경로(fr)			-0.262 (1.066)	-0.269 (1.066)					
수출 비중	15.698* (7.406)	15.704* (7.408)	15.696* (7.414)	15.678* (7.409)					
수입 비중	0.535 (1.205)	0.536 (1.205)	0.594 (1.170)	0.600 (1.168)					
L.log(고용)	0.309* (0.142)	0.309* (0.142)	0.309* (0.142)	0.308* (0.142)					
시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대상산업 수	79	79	79	79					
관측치	2,686	2,686	2,686	2,686					
Arellano-Bond Test	차수	z	P>z	z	P>z	z	P>z	z	P>z
	1	-2.63	0.01	-2.63	0.01	-2.63	0.01	-2.63	0.01
	2	0.71	0.48	0.71	0.48	0.72	0.47	0.71	0.48

주: 괄호 안은 79개 산업에 대해 군집된 강건표준오차, 유의수준은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저자 추정.

표 9.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와 조치가 미국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

구분	(1) log(산업생산)	(2) log(산업생산)	(3) log(산업생산)	(4) log(산업생산)					
자국산업 보호경로(ip)	-0.221 (0.239)			-5.837* (2.940)					
생산비 상승경로(rc)		-0.0001 (0.0001)		0.009* (0.005)					
보복관세 경로(fr)			-0.861** (0.306)	-0.807** (0.310)					
수출 비중	1.077* (0.484)	1.080* (0.485)	0.962* (0.479)	0.915* (0.461)					
수입 비중	0.869 (0.942)	0.869 (0.942)	1.006 (0.964)	1.001 (0.968)					
L.log(고용)	0.753*** (0.040)	0.753*** (0.040)	0.739*** (0.041)	0.736*** (0.042)					
시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대상산업 수	79	79	79	79					
관측치	2,660	2,660	2,660	2,660					
Arellano-Bond Test	차수	z	P>z	z	P>z	z	P>z	z	P>z
	1	-5.44	0.00	-5.44	0.00	-5.38	0.00	-5.32	0.00
	2	0.36	0.72	0.36	0.72	0.33	0.74	0.33	0.74

주: 괄호 안은 79개 산업에 대해 군집된 강건표준오차, 유의수준은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저자 추정.

② 2018년 세제개편이 미국의 해외직접투자(FDI)에 미친 영향

-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TCJA: Tax Cuts and Jobs Act)」이 미국의 해외직접투자(FDI)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본 세제개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의도했던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 및 국내 투자 확대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봄.

- 분석을 위한 기본모형으로 국가 패널모형을 활용하여 세제개편 발효 시점 전후로 미국 해외직접투자액의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분석대상 국가는 총 56개국이며, 분석 시점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로 함.

$$DI_{i,t} = \alpha + \beta \times TCJA_t + X'_{i,t} \gamma + u_i + \theta_t + \epsilon_{i,t}$$

$DI_{i,t}$: 연도 t 에 국가 i 에 대한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액

$TCJA_t$: 2018년 발효된 세제개편안 더미 변수(발효 전: 0, 발효 후: 1)

$X_{i,t}$: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국별 법인세율, 1인당 GDP, 실질GDP 성장률, 실질실효환율지수, 국별 거버넌스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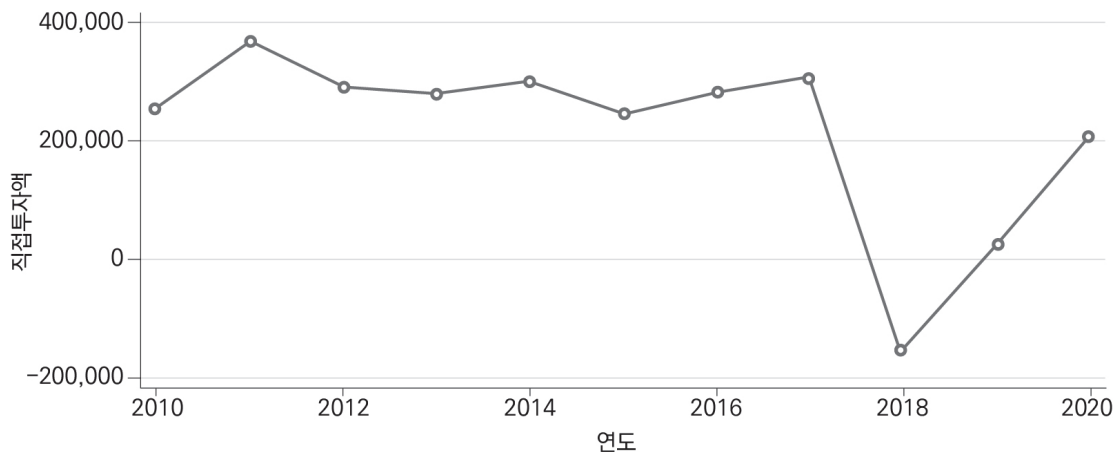
u_i : 국가 고정효과

θ_t : 연도 고정효과

$\epsilon_{i,t}$: 특이오차항

그림 2.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해외직접투자액은 유량(flow) 개념으로 (+)일 경우 해외로의 자금 유출을, (-)일 경우 미국으로의 자금 유입을 나타냄.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분석 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2018년 TCJA 시행은 미국의 대세계 해외직접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림 2]에서와 같이 2019년에는 해외직접투자액이 반등하였고 이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볼 때 세계개혁 효과의 지속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 [표 10]의 세 번째 칼럼에 따르면 2018년 TCJA 시행으로 인해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은 $3.6\% (= (e^{-0.0369658} - 1) * 100)$ 만큼 감소
 - 다만 각국 거버넌스 지수 중 정부 효율성 지수가 유일하게 해외직접투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문헌에서의 결과와 배치되는 결과

표 10. 2018년 TCJA가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친 영향

구분	(1) log(해외직접투자액)	(2) log(해외직접투자액)	(3) log(해외직접투자액)
TCJA	-0.037*** (0.002)		-0.037*** (0.002)
법인세율		-0.009 (0.180)	-0.009 (0.180)
1인당 GDP	0.029 (0.023)	0.029 (0.025)	0.029 (0.025)
실질GDP 성장률	0.434 (0.350)	0.432 (0.322)	0.432 (0.322)
실질실효환율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여론 반영 수준	0.003 (0.013)	0.003 (0.021)	0.003 (0.021)
정치적 안정성	-0.010* (0.005)	-0.010 (0.007)	-0.010 (0.007)
정부 효율성	-0.033† (0.019)	-0.032** (0.012)	-0.032** (0.012)
규제의 질적 수준	0.038 (0.031)	0.037 (0.033)	0.037 (0.033)
법치주의 수준	-0.000 (0.026)	-0.001 (0.037)	-0.001 (0.037)
부패 통제 수준	0.010 (0.018)	0.010 (0.024)	0.010 (0.024)
연도효과	포함	포함	포함
국가효과	포함	포함	포함
관측치수	360	360	360

주: 괄호 안은 강건표준오차, 유의수준은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세계거버넌스지수(WGIs)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추정.

- 상기와 같은 결과는 국가별 각 거버넌스 지수 간에 존재하는 높은 상관성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어 개별 거버넌스 지수를 회귀모형에 모두 포함시키는 대신 지수의 연도별 평균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역시 2018년 TCJA의 미국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별 거버넌스 지수 평균은 종속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표 11. 2018년 TCJA가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친 영향(국별 거버넌스 지수 평균)

구분	(1) log(해외직접투자액)	(2) log(해외직접투자액)	(3) log(해외직접투자액)
TCJA	-0.001** (0.001)		-0.001* (0.001)
법인세율		0.078* (0.033)	0.078* (0.033)
1인당 GDP	0.026*** (0.005)	0.028*** (0.005)	0.028*** (0.005)
실질GDP 성장률	0.271* (0.120)	0.296* (0.120)	0.296* (0.120)
실질실효환율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거버넌스 지수 평균	0.006* (0.003)	0.005* (0.003)	0.005* (0.003)
연도효과	포함	포함	포함
국가효과	포함	포함	포함
관측치수	310	310	310

주: 괄호 안은 강건표준오차, 유의수준은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세계거버넌스지수(WGIs)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추정.

3)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

① 무역정책

가) 다자주의 무역체제 활용 & 대(對)EU 통상정책

-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다자주의 무역체제 및 동맹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관점에서 대중국 견제를 위해 EU와의 협력을 강화

-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WTO와 대립각을 세웠던 것과는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무역체제와 규칙에 기반한 체제(rule-based system)에 큰 가치를 두고 있으며, WTO 구조 개혁을 주도하는 동시에 중국 견제를 위해 EU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
 - 바이든 행정부는 WTO 구조개혁을 위한 초석으로서 USTR에서 전문적인 무역협상을 도맡았던 인사들을 WTO 요직에 지명하는 한편, 체제 개혁 움직임을 미국이 주도하면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견제하기 위해 EU와의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중 간 디커플링에 대비하는 한편, EU와 반중 기술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기술위원회(TTC)를 구성하고 주기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나) 대(對)중국 통상정책

-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 유지 및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으며,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과 환경을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와 연계시키는 전략을 펼치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상의 중국 측 약정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며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실시했던 대중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있으며, 미·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G7 정상회의 등을 통해 중국을 공동으로 견제하기 위한 동맹국의 협조를 요청
 -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2020~21년에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 수입하기로 한 중국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문제 삼고 있으며, 외교·안보·기술·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간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동맹국과 함께 중국 견제를 추진
 -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노동 및 인권, 환경 이슈를 통상과 결부시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모습
 -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에서 중국정부에 의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나 중국과 같은 해외오염 배출 국가에서 생산된 탄소과다배출 제품에 대해 탄소국경조정제 또는 쿼터를 부과하는 방안 도입 등을 검토

② 기타 대외경제정책

가) 미국산 제품 우선구매(Buy American) 정책

-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산 제품 우선구매법」 적용 강화를 통해 연방정부 조달 분야나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자국산 제품이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시
 - 「미국산 제품 우선구매법」은 1933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연방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들이 해당 법의 빈틈을 이용하여 자국산 제품 사용을 소홀히 해 왔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미국 내 제조(Made in America)’ 행정명령 서명(2021년 1월 25일)을 통해 미국산 제품 우선구매 관련 가장 강력한 조치를 내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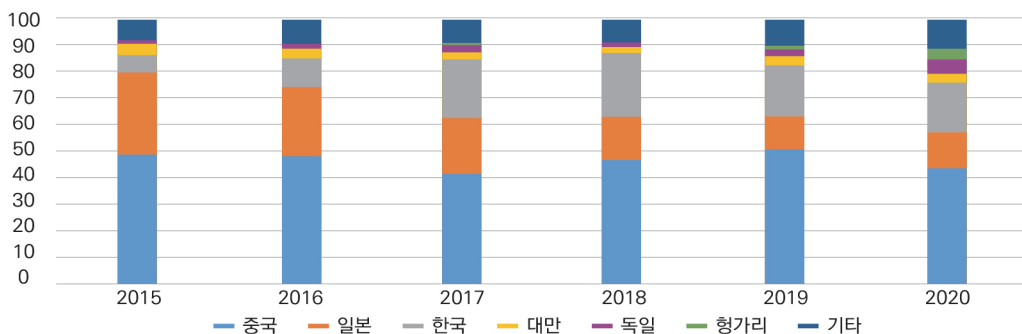
나)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정책

-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공급망(America’s Supply Chains)’ 행정명령을 통해 핵심 품목 및 주요 산업에서 중국을 배제한 미국 중심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지시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21년 2월 24일에 '미국공급망'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4대 핵심 품목(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를 포함한 중요광물, 의약품) 및 6대 주요 산업(방위, 보건, ICT, 에너지, 운송, 농업)에서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것을 지시
 -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지난 2021년 6월 8일에 발표된 백악관 100일 공급망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희토류, 전기차용 배터리,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도체 또한 제조, 조립, 시험, 패키징 등 다양한 공급망 단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이 확인됨.
 -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품목에서 미국 중심의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국내 제조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 공급망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3. 연도별 미국 리튬-이온 배터리 수입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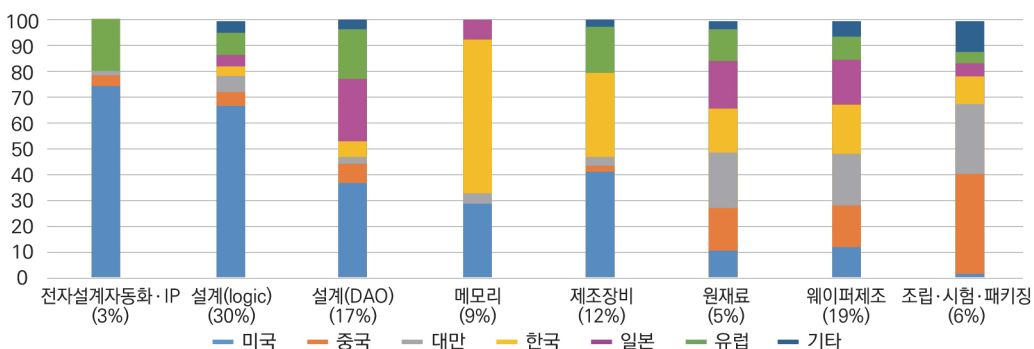
(단위: %)



자료: USA Trade Online(검색일: 2021. 10. 11).

그림 4. 글로벌 반도체 산업 가치사슬의 부문별-국가별 비중(2019년 기준)

(단위: %)



주: 반도체 산업 부문 밑의 숫자는 반도체 전 과정에서 해당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소수점 반올림으로 합이 101임.

자료: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2021. 4), "Strengthening the Global Semiconductor Supply Chain in An Uncertain Era," p. 31.

3. 정책 제언

● 디지털 무역규범 현대화에 대비하여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검토와 함께 중견국과의 디지털 교역 협력을 강화할 필요

- 디지털 무역규범 현대화에 따른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전문가 의견 및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필요
 - 현재 미국과 EU는 디지털 무역규범 표준화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소위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을 보유하고 있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디지털 통상 자유화를 강력하게 주장
 -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1998년부터 개시된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주도하고 있으며 여기서 미국이 제안하고 있는 디지털 무역규범은 요구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
 - ※ 예컨대, 오바마 행정부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타결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은 국경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개인정보보호, 컴퓨팅 설비의 지역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를 의무조항으로 규정
 - 한·미 FTA의 경우 앞서 언급한 조항 중 유일하게 국경간 데이터 이동 보장에 대해서만 노력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다른 조항들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조항들이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선불리 적용하게 될 경우 국내 디지털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
 - 이에 디지털 무역규범 현대화가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공청회 개최를 통해 관련 전문가 의견 및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필요
- 또한 디지털 무역규범 표준을 설정하기 위한 국제 논의 과정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나 EU에 대응하기 위해 중견국 협의체를 활용할 필요
 -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디지털 무역규범과 관련된 국제 표준은 미국과 EU 같은 거대 선진 경제권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 한국은 2020년 6월 22일 싱가포르와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협상 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며,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과는 디지털 무역 동맹을 추진
 - 이처럼 중견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 디지털 규범 정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은 미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활용하는 한편, 미국과 규범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필요

- 미 연방정부 제공 혜택 활용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미국과의 반도체 공급망 투자 및 기술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할 필요

-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반도체 생산 및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외기업에 대해서도 보조금 및 세제혜택 등을 지원
- 2020년 기준 한국 반도체 생산(970억 달러)이 GDP(1조 6,000억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로 세계 평균과 비교하여 10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2%로 다른 수출품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반도체는 한국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이에 우리 기업들이 미국 연방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지원혜택을 활용하여 미국과의 반도체 공급망 투자 및 기술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고위급 경제대화 채널 등을 활용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 또한 미국 측에 규범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을 요구할 필요
 -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공급망 조사를 위해 관련 기업들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방물자생산법(Defence Production Act)」을 적용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음.
 - 재고 및 판매(inventory and sales) 관련 정보는 반도체 기업들이 매우 민감해 하는 정보로서 이를 요구하는 미국정부의 조치는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
 - 한국은 미국정부의 자료 제공 요청으로 인한 기업의 핵심 영업정보 유출 가능성, 대만 TSMC의 대응과 같은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는 한편, 해당 조치와 WTO 규정과의 충돌 등을 근거로 미국 측에 규범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을 요구할 필요

● 기존에 미국으로부터 적용받고 있는 무역구제조치에 대해 미국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

-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활용하여 기존에 미국정부가 한국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무역구제조치의 문제점을 어필하고 그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이룰 필요
 -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철강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2015~17년까지 3개년 수입물량 평균의 70% 수준으로 수입 쿼터를 적용하였고, 이러한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했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및 수입쿼터 조치가 지속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정책을 실시하게 된 근거로써 제시하였던 글로벌 철강 과잉공급 또한 최근 들어 상당 부분 해소되는 모습
 - 또한 앞선 실증분석 결과에서 살펴봤듯이 전임 트럼프 정부의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가 당초 기대한 바와 같이 미국산업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EU 회원국에 대한 232조 철강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역시 상기에 언급한 근거 등을 활용함과 동시에 미국과의 공급망 협력 강화 필요성 등을 제기하며 232조 철강 쿼터제 철폐를 미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함으로써 해당 구제조치에 대해 미국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 **KIEP**